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노규성*, 강현직**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motion Policy and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Youth Start-up

Kyoo-Sung Noh*, Hyun-Jig Kang**

요약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창업 권장정책과 대학의 동조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창업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청년창업, 청년실업, 취업, 창업지원정책, 신용불량자

Abstract Whil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has come to exte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of the promotion policy of youth inauguration of an enterprise, many youths have been considering the start-up to be an alternative of the working. But it is said that many youths who had started an enterprise through the start-up education and related programs were unsuccessful mostly and dashed to get a job or became the delinquent borrower.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youth unemployment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motion policy of the youth start-up, analyse problems as a result of this examination, propose alternatives of policy to revitalize the youth start-up.

Key Words : youth start-up, youth unemployment, working, promotion policy of inauguration of an enterprise, delinquent borrower

1. 서론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2011년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32만명, 실업률은 7.6%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이나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경쟁, 취업 사교육 열풍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상황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3]. 이처럼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20~30대 청년벤처 CEO 비중이 2000년 54%에서 2008년 12%로 급감하자 정부는 급기야 청년창업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정책 사업과 대학의 동조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청년

창업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는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신용불량자나 미취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지경이다. 사실 창업이란 한번 해 볼 만한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도 성공확률이 지극히 낮은 것이 창업인 것이다.

즉 창업이란 취업의 대안이 아니라 취업을 포기할 만한 가치를 지닌 대단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권장되고 있는 창업이란 취업을 포기할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서의 창업인 것이다.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헌법재판소 소장비서관

논문접수: 2012년 10월 2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0월 20일

그러나 교육과 창업 관련 자금 지원을 받아 쉽게 창업은 할 수 있어도 성공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대학과 창업경험을 가진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창업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문헌 조사, 청년창업가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 포럼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청년창업의 실태와 문제점

2.1 청년창업의 개념

청년창업이란 개념은 아직 정립된 것이 아니다. 다만 청년이 하는 창업을 의미하므로 이 둘의 개념을 살펴보면 쉽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년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20대 정도인 남자를 이르며 때로 그 시기에 있는 여자를 포함해서 이르기도 하는 세대를 말하며, 창업이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을 말한다[5].

따라서 청년창업이란 일반적인 창업의 한 유형으로서, 20~30대의 사람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

창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40세 미만을 청년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2 청년의 창업 이유

최근 청년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실업률 하락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8]. 청년창업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템과 자신감으로 기업이 정신 발현을 통한 미래 비전 실현이 창업의 이유이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개성시대 혹은 N세대라고 불릴 만큼 개인의 의사와 개인의 생각을 매우 중요시 생각한다. 그래서 타인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고 지휘하는 삶을 꿈꾸고 실행에 옮기곤 한다. 또한, 본인이 하려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가능성을 보고 젊음과 열정 그리고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한다.

둘째, 창업을 통하여 취업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취업 고육책의 일환이 또한 이유 중 하나이다. 취업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청년 스스로 미취업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사업 목표가 있어서 하는 창업이라기보다는 생계 유지라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생각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표 1 참조).

셋째, 정부의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업장려 정책에 따라 창업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

〈표 1〉 연령대별 창업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	생계유지 (다른 대안 부재)	창업을 통한 성공 가능성	가업 승계를 위해	전공분야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	100	79.2	16.3	2.1	0.5	1.7	0.1	0.1
소계	7,039	5,575	1,147	148	35	120	7	7
40대 미만	1,274	64.9	29	2.1	0.9	2.9	0.1	0.1
40대 이상	5,752	82.4	13.5	2.1	0.3	1.4	0.2	0.1
모름/무응답	13	66.8	33.2	-	-	-	-	-

(자료원: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1) 여기에서 정리된 청년창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은 청년창업으로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경험을 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과 포럼 등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임

〈표 2〉 2008~2010년 기간 연령별 신설법인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08		2009		2010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수 비중
30세 미만	2,027	4.0	2,417	4.3	3,117	5.2
30~39세	13,751	27.0	14,993	26.4	15,401	25.5
40~49세	21,478	42.2	23,252	40.9	24,254	40.2
50~59세	10,446	20.6	12,409	21.8	13,633	22.6
60세 이상	3,115	6.1	3,698	6.5	3,823	6.4
기 타	38	0.1	61	0.1	84	0.1
총 계	50,855	100.0	56,830	100.0	60,312	100.0

(자료원 : 중소기업청, 양현봉·박종복, 2011 재인용)

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를 2012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 창업을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인식하면서 요즘 대중매체 혹은 길거리 공익선전물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창업을 권장하고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강남구 청년창업, 서울시 2030청년창업, 경기도 G창업, 슈퍼스타 벤처 등 수많은 선전과 권유 광고 내지는 안내문이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2.3 청년창업의 현황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증가하는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청년창업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신설법인 수는 2008년 5만 855개사를 기록한 이후, 2009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17.5% 증가한 5만 6,830개, 2010년에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6만 312개사를 기록했다(표 2 참조). 특히 경기회복 기대감과 애플리케이션 시장 확대 등이 맞물려 2010년도 신설법인 수 중에서 30세 미만 청년층의 창업이 2009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29.0%)을 기록하였다[7].

이와같이 최근 청년창업이 다소 증가하는 하고 있지만 2001년 이후 벤처기업 CEO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즉 2001년 벤처기업 CEO 중 20~30대의 비중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47.6%, 2005에는 15.1%, 2008년에는 11.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 이후 기술·지식 집약적인 20~30대 청년층의 신규 창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7].

〈표 3〉 벤처기업 CEO의 연령대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1	2003	2005	2008
20대	6.0	3.8	0.3	0.1
30대	50.2	43.8	14.8	11.7
40대 이상	43.8	52.4	84.9	8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원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양현봉·박종복, 2011 재인용)

2.4 청년창업의 문제점

과거에도 청년 스스로 목표와 도전의식을 가진 청년 창업이 있었고 이러한 창업은 벤처로 성장하면서 경제사회에 활력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지나치게 과다한 청년창업 붐 조성 현상으로 청년창업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뚜렷한 목적 없는 창업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창업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추진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층이라고 연령대의 창업에는 계획보다는 의욕이 앞서서 이루어지는 창업이 간혹 있다. 둘째, 현실도피성 창업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취업 준비생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데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되는 반면 좋은 직장에 취업 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려운 취업 대신 창업의 성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취업 준비할 때 쓰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창업하는데 투자한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기도 한다. 셋째, 준비가 부족한 창업문제이다. 창업은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창업 후에는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을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누군가가 하는 일인데 나도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창

업하는 청년이 꽤 많다는 것이다.

넷째, 신용불량자의 양산 또한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벤처창업의 성공확률이 3~5% 정도라고 한다면 청년창업의 성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는 결국 창업을 한 청년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사업이란 재정적 투자가 필수적인 바, 본인과 주변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필요시 신용기반의 용자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신용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는 곧 신용불량자가 됨을 의미한다. 수많은 청년 창업은 수많은 청년 신용불량자를 낳을 수 있는데, 최근 청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6].

다섯째, 취업 어려움의 가중 혹은 지연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은 졸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만약 청년이 창업을 했다가 사업에 실패하였는데 다행히 신용불량자가 안되었다면 늦더라도 취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취업재수보다 더 늦은 취업 도전이 될 것이며, 그만큼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취업 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청년창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3.1 청년창업 지원제도 현황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2011년도 총 14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예산은 1,120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이를 부처별로 나누어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8개 사업에 770억원, 고용노동부가 2개 사업에 111억원을 지원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2개 사업에 200억원, 대전광역시가 20억원, 경기도가 19억원을 책정하여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부처와 지자체가 청년창업을 지원하였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창업교육에 54억 5,000만원, 창업경진대회에 19억원, 사업화 지원에 639억원, 기타(창업선도대학 및 창직·창업인턴제사업) 40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7].

금기현[4]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2012년 지난해 보다 2.6배 증가된 1.6조원 청년창업자금 지원, 청년 기업가 부담을 줄여 주는 금융제도 신설, 공공기관/대학/선배기업에 의한 청년창업가 총력 지원체제 구축,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개선,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해 전국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고용 없는 저성장 시

〈표 4〉 2011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 현황

구분	사업명	예산 규모	소관부처	비고
창업교육	대학 창업강좌	13.5억원	중기청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으로 통합
	창업동아리 지원		중기청	
	창업대학원 지원	12억원	중기청	5개 대학원
	기술창업 아카데미	20억원	중기청	
	하이서울 창업스쿨	9억원	서울시	
경진대회	창업경진대회 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10억원	중기청	창업선도대학육성 사업에 통합
사업화지원	소셜벤처 지원사업	9억원	고용부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229억원	중기청	
	청년창업 사관학교	180억원	중기청	2011년부터 추진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191억원	서울시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20억원	대전시	
	G창업 프로젝트	19억원	경기도	
기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305.5억원	중기청	2011년부터 추진
	청년 창직·창업인턴제 사업	102억원	고용부	2010년부터 추진
합계		1,120억원		

주 :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조사자료(2011년 2월 현재)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임
(자료원 : 양현봉·박종복, 2011)

대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3.2 청년창업 지원제도의 과제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 목적만큼 청년창업의 수가 많아야 하므로 창업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정책은 많지만, 정작 창업이 성공을 하도록 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자칫 앞에서 지적한 청년창업의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를 낳게 한다.

특히 창업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소신, 열정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청년창업을 지원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양산 정책에 밀려 제대로 된 청년창업마저 성공확률을 낮추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청년창업의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청년창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분석한 청년창업의 문제 중 목적 없는 창업, 현실도피성 창업은 신용불량자 양산 및 취업 어려움 가중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창업지원보다는 취업 역량 강화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반면 준비가 부족한 창업은 철저한 교육과 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1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상 과제

첫째, 정책지원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창업 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대기업위주로 이루어져서인지 창업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도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자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사회적 인식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한 결혼정보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사무직원의 배우자지수는 63.47인 반면, 청년창업자의 지수는 53.3으로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다[1]. 사업실패는 곧 인생실패로 낙오되고 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것이다.

둘째,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요즘 기술 진화 및 신기술 출현 등으로 기술관련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즉 해당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업지원 관련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많은 창업지원이 소홀해지곤 한다.

셋째, 사업지원 시기의 비유연성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자 모집 시기가 유연하지 못하다. 통상적으로 1/4분기에 50%에 가까운 사업자 모집공고가 나기 때문에 연초에 창업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다. 연중수시 응모하는 사업이 50% 정도이지만 사업지원금이 소진되면 끝나기 때문에 공모 초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 사업을 보면 대개 1년이 기한이다. 물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지만, 자금이 태부족인 창업기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1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 지원하는 사업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곳에서 지원을 받으면 1년안에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다.

넷째, 평가 및 검증의 부적격성을 들 수 있다. 창업 아이템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논의된 바와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창업 지원 정책으로 대부분의 부처와 지자체에서 수많은 지원사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에 수많은 청년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 서류의 량도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분야와 내용적 깊이도 천차만별이다[6].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사업 기간이 단기간이다 보니 참여창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날림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좋은 아이টে임을 가지고도 서류 작성이 부실하거나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에서 탈락되었다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일명 브로커(컨설턴트)가 등장하여 제대로 된 사업보다는 브로커에 의한 형식적 사업계획서 작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창업시장에 나돌 정도이다[2].

3.2.2 사업화교육 지원사업의 과제

현재 청년창업에 대한 보육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과다하다는 평가이다. 창업은 분명히 보육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미 아이টে임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로서는 별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라는 평가이다. 많은 전문가와 청년창업자들의 견해는 정부가 청년창업을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양산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된 바와같이 청년창업의 주된 문제는 창업의지 미약 혹은 현실도피성 창업으로부터 발생하므로 보육 지원사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반면 진정한 벤처정신의 청년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3.2.3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과제

창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난관도 자금의 확보이다. 청년창업에 있어 이 문제는 사업 성공의 최대관건이다. 김기화[1] 등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창업시 가장 어려운 애로 사항으로 자금 부족인 것으로 분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표 5 참조).

〈표 5〉 창업시 가장 어려운 점(단위 : %, 복수 응답)

	대학생	직장인	전체
주위에서 말린다 (낮춰본다)	16.1	18.0	17.4
정보를 구할 수가 없다	19.4	6.6	10.9
자금이 부족하다	61.3	86.9	78.3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38.7	6.6	17.4
아이템을 홍보하기 어렵다	12.9	26.2	21.7
경영능력(경험등)이 부족하다	32.3	39.3	37.0
기타	0	3.3	2.2

(자료원 : 김기화, 심서현, 채승기, 2011. 9. 6)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은 창업이나 사업 추진시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한계를 보인다. 아주 적은 금액을 다수의 업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창업 제품개발이나 사업 추진에 얼마간의 지원이 되긴 하겠으나 창업을 성공으로 가도록 하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6,7].

또한 용자제도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고,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창업자가 창업하는 단계에서 용자금을 상환하는 일과 제품을 만들어 가는 단계에서 연대보증이라는 제도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미래가치로만 판단해서 자금을 용자해주는 일을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년창업(실패)으로 인해 치를 대가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3.2.4 인력지원 사업의 과제

요즘 청년창업은 기술집약형 사업이 주를 이룬다. 그에 따라 기술인력의 수급이 자금의 수급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창업기업은 소기업인 만큼 수급이 어려운데 정부 지원은 수급 조절이나 인력 조달에 관한 지원이 태부족인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 체제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6].

또한 컨설팅,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많은 정책이 청년창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당수의 정책은 확실한 매출을 근거로 지원되는 정책이어서 청년창업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 청년창업기업에게 있어 정작 필요

〈표 6〉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조달 방법 [1순위] (2011.8)

(단위: %)

	전체 자영업자			청년층 자영업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	61.3	70.6	58	64.3	71.3	60.8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자금	3	4.6	2.4	5.8	7.6	4.8
친지·동업자 이외 타인에게 빌림	3.6	3.4	3.7	4.1	4.7	3.8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11.4	15.7	9.9	8.7	9.5	8.2
사채, 대부회사 등	0.6	0.5	0.6	0.4	0.5	0.3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 등	0.4	0.3	0.4	0.4	0.6	0.3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었음	19.4	4.9	24.6	15.5	5.8	20.4
기타	0.3	0	0.4	0.8	0	1.3

(자료원: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연간), 정재호, 2012 편집)

한 혜택, 예를 들어, 창업단계에서 채용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제도는 아직 없다.

청년창업에 대한 경영지원정책 중에 법률, 회계, 특허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얼마나 많은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창업자 혹은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초기 창업자는 이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7].

3.2.5 설립·운영지원의 과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창업기업과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미 맺어진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나 임의적 수혜 관계는 창업기업에게는 도전하기 어려운 성이다. 즉 대기업이 임의적으로 혹은 이해관계로 인해 선정한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창업기업이 타파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이다.

또한 창업 실패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창업 이상으로 실패 위험이 큰 것이 청년창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실패에 대한 용인과 재기의 기회 부여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가 개선을 제안했으나, 정부의 대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청년창업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7]. 아무리 많은 창업 지원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실패에 대한 용인과 제도적 기회 마련이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청년창업 활성화정책 개선 방안

이상의 과제를 정리한 결과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현재의 청년창업을 양산하는 정책 대신 벤처정신과 열정을 가진 성공가능성이 보인 청년창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4.1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

무엇보다도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열정과 목표를 가진 청년창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야 한다. 취업을 대신하는 창업청년에 대해서는 창업과 취업 교육의 조화로운 병행 방안이 필요하다. 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미약할 경우 취업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부처와 관련 기관, 지자체가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복지원이 허다한데, 규모는 작은데다 단기적이고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니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는 태부족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 내에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구분, 청년창업 기금조성, 유연한 정책 집행 등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4.2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상 개선방안

첫째, 정책사업 신청기간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된다. 창업이란 적기가 정부 정책에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아이템이나 창업자의 사업일정과 맞물려있는 것이다. 정부나 정책 집행기관의 편의에 의한 지원기간 배정이 아니라 지원 정책 수혜가 연중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 배정 일정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 및 기술 관련 전문가의 세분화와 정교한 맞춤형 평가작업이 요구된다. 각종 사업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사업들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도록 각 분야 전문가 육성 및 활용 방안이 절실하다.

셋째, 사무실 임대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창업자의 사업이 제품 개발로부터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최소한 2~3년이 소요될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모두 5년의 기간을 두고 성장한 기업이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맞추려면 1년 안에 성과물을 내거나 성과물이 만나더라도 알아서 꾸러가야 하는 사업구조를 가져야만 한다.

넷째, 평가와 검증의 신뢰성 제고가 요구된다. 아무리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책 자금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청년창업자들은 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거친 투명한 선발과정이 정착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4.3 사업화교육 지원의 개선방안

보육사업과 창업지원 사업의 조화가 요구된다. 창업보육에의 지나친 비중은 부실한 청년창업 양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취업을 대신하는 창업 지원 청년에 대해서는 창업과 취업 교육의 조화로운 병행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에서 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미약할 경우 취업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증된 사업이나 창업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보다는 지원(금) 형식의 사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4.4 사업화자금 지원의 개선방안

우선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제품의 개발 뿐 아니라 마케팅과 판로개척 등 자생할 기초가 마련되도록 하는 자금 지원 기반 형성이 요구된다. 처음에 지원하는 한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투자를 받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후 거기에 맞는 금액을 선정하여 출자를 하되, 한번에 지원하기 보다는 성과를 체크하여 도달금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7]. 또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자격을 창업 하기전이나 창업 후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창업 후 1~3년 사이의 창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기술신용 기반의 융자 확대도 요구된다. 또한 상환 거치기간이나 유예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창업자가 안심하고 성과물을 창출하는 데에 전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개발기간이 2~3년이고 판로가 개척되는 기간까지 합치면 4~5년이 지나야 자금 상황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4.5 인력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보조사업이 절실하다. 대우나 미래 비전이 취약한 창업기업에는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병역특례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인턴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병역특례자가 1년 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폐단도 제도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4.6 설립·운영지원의 개선방안

먼저, 청년창업 지원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청년창업자는 아이템과 열정, 성공의지는 있지

만 자금이나 인력, 노하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초기에는 청년창업자가 비즈니스모델이나 제품(상품)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매출기반이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집행도 필요하다.

둘째, 공공시장에서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창업 이후 성과물(제품)이 나오면 이의 상품성과 품질에 대해 검증하고 검증되면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공시장이 창업기업 시장 개척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6].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투명한 거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으로 하여금 창업중소기업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회사에게 균등 기회 부여, 중소기업과 파트너십 혹은 컨소시엄을 맺는 사업자 우선 선정을 제안한다. 공개입찰을 가능한 한 세분화하고 대기업과 공생관계가 형성되도록 추진한다면 창업기업의 활로가 개척될 것이다.

넷째, 중소벤처의 지적재산권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허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벤처를 망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국가간 FTA체결 증가로 중소벤처의 특허 분쟁 대비가 시급해졌다. 따라서 중소벤처를 위한 집단적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창업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 멘토링 등 전문인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창업기업에게 있어 전문인력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작은 기업은 자본과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전문 역량을 검증하거나 현장에 필요한 역량 교육을 마친 전문가와 멘토를 엄선하여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6,7].

여섯째, 선의의 실패에 대한 용인과 재기의 기회 부여가 절실하다. 실패에 대한 제도적 기회 부여 정책이 있긴 하나,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실패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실패한 사람은 회생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밀한 재기 컨설팅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6,7].

5. 결론

본 연구는 그간의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등장한 청년

창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이슈와 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산업적 가치를 갖는다. 특히 양산되는 청년창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진정한 청년창업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방향 전환을 제안한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과 통계 기반의 이론적 연구로서 현장의 광범위한 검증은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 현장에서 성공가능한 창업 아이템의 발굴 및 방향 제시에 대한 세심한 조사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청년창업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보다 세분화된 청년창업 성공 아이템과 성장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찾는 미래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형태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기화·심서현·채승기(2011), <http://blog.joinsman.com>
 [2] 김상훈(2011), 청년창업 지원금은 브로커 등 ‘꾼’들의 먹잇감… 사업계획서 5만원만 내면 ‘뚝딱’, 동아일보(2011.10.24)
 [3] 김성일(2011), 청년창업지원, 현실적인 지원책 더 늘려야, 이데일리(2011.12.07)
 [4] 금기현(2012), 청년창업지원 정책의 이해, 제4차 미래IT강국포럼 프로시딩, 미래IT강국전국연합
 [5] 네이버 사전
 [6] 노규성(2012), 청년창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4차 미래IT강국포럼 프로시딩, 미래IT강국전국연합
 [7] 양현봉·박종복(2011),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ISSUE PAPER 2011-269, 산업연구원
 [8] 정재호(2012), 청년층 자영업의 실태와 과제, THE HRD REVIEW 15권 1호(2012-03-30)
 [9]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노 규 성



- 1984년 2월 : 한국외대 경영학과(경영학사)
- 1985년 8월 : 한국외대 대학원 경영정보학과(경영정보학 박사)
- 2003년 ~ 2010년 : 中國 延邊科學技術大學 兼職教授
- 1997년 ~ 현재 :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04년 ~ 현재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 2012년 ~ 현재 : 미래IT강국전국연합 상임대표
- 관심분야 : 디지털정책&스마트융합, 디지털경제민주화
- E-Mail : ksnoh@sunmoon.ac.kr

강 현 직



- 1982년 2월 : 건국대학교(상학사)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언론학 석사)
- 2012년 2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언론학 박사)
- 1986년 6월 : 서울신문 기자
- 1992년 9월 : 문화일보 기자, 편집부장
- 2001년 10월 :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수석연구원
- 2006년 4월 : 아시아경제신문 편집국장, 논설실장
- 2010년 8월 ~ 현재 : 헌법 재판소 소장비서관
- 관심분야 : 저널리즘, 매스커뮤니케이션, 언론법
- E-Mail : jigkh@hanmail.net